

## 민주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 민주노총 제64차 대의원대회 참가 후기와 제언

/ 정광진 민주노총 대의원

### 높은 관심과 두툼한 회의 자료

2월 7일, 민주노총은 제64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원하는 국민의 분노가 촛불 행동을 통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대회였다.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높았다. 재적 대의원 1,006명 중 789명이 참석했고, 참관인석도 많이 찼다. 서울 KBS 아레나홀(옛 KBS 88체육관)은 열기로 가득했다.

대회장 출입구를 지나 지정된 좌석에 앉기까지 10여 종에 이르는 선전물을 받아야 했다.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정파나 의견 그룹, 정당 명의로 배포된 이 선



회순 변경이 부결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결국 정치 전략과 관련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2017년 사업 계획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정책대의원대회에 이어 다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이며, 3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야 한다.

전물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보수 야당 지지로 팔아먹지 말자!!”(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변혁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일동) “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을 대표해서 총파업과 대선 투쟁을 힘 있게 결의해야 한다.”(노동전선) “민주노총 정치 전략, 선거연합정당은 실패의 반복이다.”(사회변혁노동자당) “선거가 아닌 투쟁! 투쟁으로 정면돌파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야권 연대는 실패와 환멸만 남길 뿐.”(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기성 정치에 줄서지 말고 대선 전에 진보연합정당 건설하자.”(민중연합당)

정치 전략이나 대선 방침과 관련하여 대부분 보수 야당 지지나 야권 연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지만,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는 그 사이에서도 차이가 컸다. 민주노총 정치특위와 집행부에서 안전으로 상정한 선거연합정당 추진에 대해 이견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대선과 관련해서도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주장과 민중 경선을 통한 노동자·민중 후보로 돌파하자는 주장으로 구분되고, 민주노총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 진보-좌파정당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입장차가 분명했다.

대의원대회가 쉽게 끝나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의원 인식표를 목에 걸고 400여 쪽에 이르는 두꺼운 회의 책자를 넘기기 시작했다.

### 아홉 개의 안전과 회순 변경의 부결

1시간 정도 진행된 기념행사를 마치고 대의원대회 개회가 선언되었다. 중앙집행위원회(‘중집’)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안전 아홉 개는 다음과 같았다. ① 2016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 ② 정치 전략, ③ 대선 투쟁 사업 계획, ④ 조직혁신전략, ⑤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⑥ 대선 투쟁 특별기금 부과금 결의, ⑦ 의무금 인상, ⑧ 규약 개정, ⑨ 결의문 채택.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처리될 수 없는 안전들이지만, 특히 ②와 ③은 첨예한 입장 차이가 확인되었으니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안전이었다. 원안대

로 진행된다면 ②, ③호 안건으로 인해 ⑤와 ⑦ 등 중요한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한 대의원이 회순 변경을 요청했다. ⑤호 안건인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를 ②호 안건으로 올려서 우선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정치 전략과 대선 투쟁에 대한 안건은 안건 처리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었다. 예상과 달리 반대가 많았다. 민주노총 중집 성원들부터 반대했다. 지난해 8월에 열렸던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유회된 안건이기에 우선 처리하지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역사에서 최초로 열렸던 그 정책대의원대회에 대해서는 『좌파』 2016년 11월호에 실린 허영구의 글을 보라.) 이어서 회순 원안에 찬성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결국 회순 처리를 위해 표결까지 갔지만, 수정안은 740명 중 358명의 찬성(48.3%)으로 부결되었다.

원안의 회순으로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안건인 “2016년 사업 평가와 결산 승인” 안은 박수로 통과되었다.

②호 안건 “정치 전략”이 상정되었다. 정치특위 위원장이 취지를 설명했고, 뒤이어 정치특위 간사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의원들의 질문 공세와 수정안 제시가 이어졌으나, 정치특위는 민주노총 중집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이니 힘 있게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정된 “정치 전략”은 아래와 같았다.

1.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 전망을 제시하고, 노동자계급의 단결 원칙하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에 대응하여 민중단일후보 전술을 채택하고, 대선 실천단을 구성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3.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 투쟁을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외연 확대와 연대 강화의 성과를 중심으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에 제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4.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농민-빈민 등 대중조직과 함께 추진한다.
5. 민주노총은 선거연합정당을 위한 노동자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요약하자면,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진보변혁적 정치질서를 재편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중단일후보를 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지자체 선거 전에 선거연합정당을 농민-빈민 단체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8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 제출했던 정치 전략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당시에 제시된 정치 전략도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노·농·빈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및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작년에 제출되었다가 정족수 부족으로 다루지 못한 안건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이유는 민주노총 정치특위

나 집행부가 바라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시각, 즉 관점이 그때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호명하면 진보좌파정당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인식의 오류 때문이다. 진보의 다양성이나 좌파 정치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적 산물이라 하겠다. 당헌이나 당규, 이념이나 지향에 따라 다양하게 실재하는 진보정당이나 좌파-계급정당 등을 단일한 정치결사체로 묶겠다는 발상이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정책대의원대회에서도 10시간에 이르는 토론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견해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정치 전략이었다. 합의될 수 없는 정치 전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정치 전략에 조직적 힘과 무게를 실기 위해 정치위원회를 대신해서 산별위원장들과 지역본부장들로 구성된 ‘정치현장특별위원회’(‘정치특위’)를 구성했다. 정치특위는 정치 전략에 대한 기본안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상과 경로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 왔다.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 현장 토론, 진보정당 및 의견그룹들과의 논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대선 시기 민중후보 전술’과 ‘2018년 선거연합정당 건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정치 전략을 제시했다. 정치특위가 제시한 정치 전략은 1월 16일에 진행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큰 논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정치특위는 “현장 토론을 통해 취합된 결론”임을 강조했다지만, 토론이 이루어진 ‘현장’은 16개 가맹조직 가운데 3개와 산하조직 16개

가운데 8개가 전부였다. 그것도 현장 조합원들과 토론한 것이 아니었다. 운영위원회, 임원-사무처 회의, 정치위원회 등 간부들과의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특위는 현장의 목소리가 모아진 정치 전략이자 민주노총 중집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실패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만들어진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 전략의 후보 전술이 대선 투쟁과 연관되어 있느냐?” “선거연합정당이 불가능한데 왜 자꾸 상정하느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당은 빼고 가겠다는 것인가?” “100만 선거인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현장 토론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느냐?” “5개 정당과 11개 의견그룹이 동의했느냐?” “민중 경선이 촛불의 요구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냐?”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넘어갔으나, 의장이 수정안이 없으면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수정안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원안을 폐기하자는 안을 제외하고도 다섯 개의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다. “원안의 3항과 5항을 삭제하자.” “2항을 삭제하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를 삭제하고 ‘선거연합정당’도 빼자.” “1항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하자.” “4항을 삭제하자.”

원안과 내용이 가장 다른 수정동의안부터 찬반 토론과 표결이 이어졌다. “1항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하자”라는 수정동의안은 재석 대의원 611명 중 249명(40.7%)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4항을 삭

제하자”라는 수정동의안도 610명 중 찬성 39명(6.4%)으로 부결되었다. “원안의 3항과 5항을 삭제하자”라는 수정동의안은 606명 중 찬성 227명(37.5%), “2항을 삭제하자”라는 수정동의안은 584명 중 찬성 40명(6.7%)로 모두 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수정동의안이 남아 있었다. 원안의 1항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를 삭제하고, 2항과 3항을 각각 “민주노총은 17년 대선에서 진보진영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 단일화 절차는 각 진보세력의 후보 확정 후 출마 조직 간 합의로써 정하며, 단일화된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재정과 인력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선기획단을 구성해 논의한다”와 “진보진영 대단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방침은 충분한 조직 내 토론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 제출된 정치방침은 조직 내 동의가 부족하다. 원안에서 제시한 선거연합정당 등 정치방침은 하반기 대대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대선 이후 대중적 토론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논의하고 하반기 대대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한 것이었다.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대의원 613명 중 300명(48.9%)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되었다.

모든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니, 남은 것은 원안뿐이다.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의원들이 자리를 떠났다. 참석했던 789명의 대의원 중 601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에 대해 표결했으나 원안조차도 211명(35.1%) 찬성함으로 부결되었다. 민주노총의 정치 전략 자체가 부결된 것이다.



뒤이어 ③호 안건인 ‘대선 투쟁 사업 계획’이 상정되었다. 누군가의 성원 확인 요청이 있었고, 의결정족수인 504명에 모자라는 464명의 대의원이 재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64차 정기대의원대회는 유회되고 말았다.

대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선 시기 민주후보 전술”과 “2018년 선거연합정당 건설”이라는 무리한 정치 전략을 제시하고 회순 변경 요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2017년 사업 계획”과 “의무금 인상”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대의원대회를 끝내고 말았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2월 13일에 「민주노총 대의원과 조합원 동지들께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2월 21일에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 “대의원들의 의견을 힘 있게 모아 내지 못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3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 참석을 호소했다.

대의원대회가 유회된 이후 2월 16일에 소집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임시대의원대회를 3월 7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유회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대선 투쟁 사업 계획과 조직혁신전략은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건’으로 상정하고, 사업 계획 중 대선 대응 기본 방침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지난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시한 정치 전략은 폐기된 듯하지만,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3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대선 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1/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퇴진 투쟁이 만들어 낸 조기 대선으로서, “한국 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대선 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한다.
- 2/ 3월 29일 각 지역별 대선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 대회를 사회적 총파업 연대 기구 출범, 2017 투쟁실천단 발대식과 병행하여 조직한다.
- 3/ 4월 15일(안) 노동자 민중의 대선 요구 실현을 위한 민중대회(가)를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하여 진행한다.
- 4/ 투표 방침
  - 기본 방침
    -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
    - 반노동, 친재벌 후보의 낙선을 조직화한다.
  - 투표 방침
    - 중집에서 추후 논의
- 5/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 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보수 야당 지지를 공공연하게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기에도 더욱 그러하다. 투표의 기본 방침인 “반노동 친재벌 후보의 낙선을 조직화한다”나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에는 큰 이견이 없겠으나, 추후 중집을 통해 정하겠다는 투표 방침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의 범위와 후보의 검증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5항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난 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수 야당 지지를 선언하고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라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 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에 돌입한 ‘사회연대노동포럼’의 활동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나 산하조직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 야당과의 정책 연대나 정책 협약을 통한 지지 또는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한다고 했지만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가맹·산하조직과 조합원은 그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해 보수정당이나 보수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적극적이며 명확한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촛불혁명은 새로운 역사다. 온갖 낡고 부패한 구시대적 산물들을 청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낡은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기회주의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구악과 단절해야 한다.

3월 7일 다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것이다. **조교**